"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진실 규명하라"… 전국 교사들의 목소리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7주째 집회… 주최측 추산 20만명 참여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개정 등 요구
하늘 바라보며 구호 제창… 곳곳 눈물도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앞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교사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예쁜 아이들과 좋은 학부모들 만나길 응원해요' 선생님과의 대화 속이 당연한 말이 언제부터 간절히 바라야 하는 말이 됐을까요."

지난 7월 19일 극단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이틀 앞두고 검은 옷을 입은 전·현직 교원 20만명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교권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

전국 교사들은 지난 2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국회대로 일대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집회'를 열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전국에서 20만명 이상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의 이동을 위해 버스(비공식 대절 포함) 800여대와 비행기 등이 동원됐다.

숨진 서이초 교사와 예전 학교에서 기간제 생활을 함께한 동료들은 고인을 추모하는 편지를 읽었다. 전 동료 A씨는 "(고인이) 이번 여름방학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만나자고 연락해줬다. 이번엔 무조건이라며 다짐을 받아내듯 말했는데, 이젠 그 약속을 지킬수도, 다시 볼 수도 없어 가슴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또 다른 전 동료 B씨는 "선생님은 퇴근 후 운동을 하고 독서를 즐기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심지가 곧은 사람이었다. 미술에 재능 있어 직접 학습지를 만들기도 했다. 노란 바구니를 들고 반으로 향하던 (고인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다"며 그를 추억했다.

숨진 교사의 대학교 대학원 동기였던 C씨는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축복으로 여긴다는 것, 삶을 살아있음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그를 기억했다.

이어 "새벽에 사망 소식을 듣고 다음 날 학교로 출근했다. 친구가 떠났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이들과 수업하고 웃어줘야 했다"며 "그 기괴한 기분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린 점점 가르칠 용기를 잃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동료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발언을 들으며 일부 교사들은 눈물을 쏟았다. 고인을 기리기 위해 하늘을 보고 "진실 없는 사건 수사, 진실 규명 촉구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교사들을 보호하라",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등의 구호를 외칠 때는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절규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교원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분별하게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학생은 책임과 배려, 절제를 배우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학생, 학부모, 교육당국의 의무와 책무성을 강화 △즉시 분리된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현실적 대응 방안 마련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 △교육과 보육의 분리 △교육에 대한 교사의 권리 보장 △모든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전 과정에 교사 참여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여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들의 외침을 들어라.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학생과 교육활동, 교사들을 보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세종시 성희롱 교원평가 피해자 D씨도 참석해 발언했다. D씨는 "지난 7월19일은 제가 학교에 사직원을 제출한 날"이라며 "서이초 교사 사망 소식을 접하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던 교실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무서웠을까 싶어 가슴을 쳤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시위현장을 바라봤다. 서이초 사망 교사 또래의 젊은 교사들과 동행한 중년의 부모들도 눈에 띄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리를 지켰다.

이번 집회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숨진 후 일곱번째로 열리는 대규모 집회다. 전국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삼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날 교사가 휴가를 쓰면 징계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나와 충돌이 우려된다. /뉴시스

도내 학생 안전사고 비급여 치료비 지원

장연국 도의원, 조례안 발의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비급여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초등학생에게만 지급되던 입학지원금도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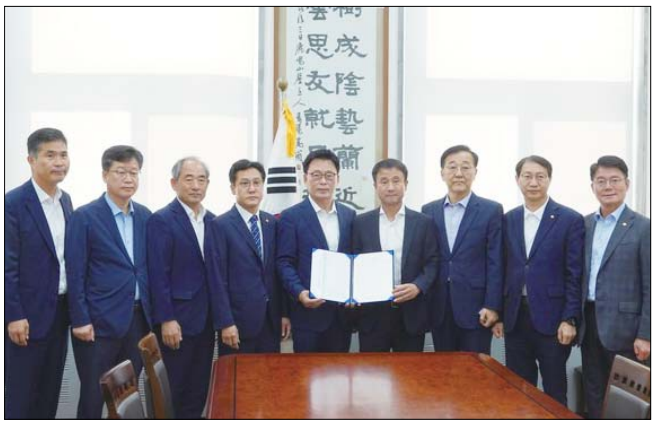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03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300만 원 한도의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대상)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전북도 및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2023년도 입학생부터, 중·고등학교의 경우 2024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지원 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한병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일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과 전북특별법 개정안 처리 건의문'을 전달했다.

민주 전북 국회의원-박광온 원내대표

"새만금 예산 복원" 공감대

한병도 의원 "도민 분노 높아… 최선봉에 나서 싸울 것"
박광온 원대 "새만금 예산 삭감, 예산 폭력 · 예산 독재"
전북 의원들, 지역 현안 대응 위한 비상 행동 나서기로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한병도·김성주·김윤덕·안호영·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 의원) 일동이 지난 1일,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건의했다.

이날 오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김성주·김윤덕·안호영·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 의원과 함께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과 전북특별법 개정안 처리 건의문'을 전달하고 원내지도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이번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전북도민의 분노가 높은 상황으로, 전북 의원들은 최선봉에 나서 싸울 것이다"라고 말하며, "새만금 예산을 그대로 두고는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결의로 원내지도부도 힘을 모아주기를 건의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광온 원내대표도 "새만금 예산 삭감은 예산 폭력이자 예산 독재다"라고 말하며,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정부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 일동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만금 예산 사수와 특별법 개정 등 전북 현안 대응을 위한 비상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김재훈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당 대표 1급 포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읍·고창)가 지난 1일,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역과 더불어민주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 대표 1급 포상(우수 지역위원장)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현장중심형·지역밀착형' 의정활동이 이번 당 대표 1급 포상의 바탕이 되었다.

실제, 윤준병 의원은 대표적인 의정활동 중 하나로 정읍과 고창 읍·면·동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토방청담(土訪淸談)'을 이어오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해 국민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를 위한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서명운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 윤 의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펼치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내년도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해병대원 사망사고 외압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난맥을 질타하며 국정 쇄신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지역의 묵은 숙원과제였던 △내장저수지 국립공원구역 해제, △노을대교 건설 확정 등을 해결하는 결실을 맺었고, 200건이 넘는 민생법안·지역발전법안을 발의하는 등 전문성과 성실함을 기반으로 한 '해결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